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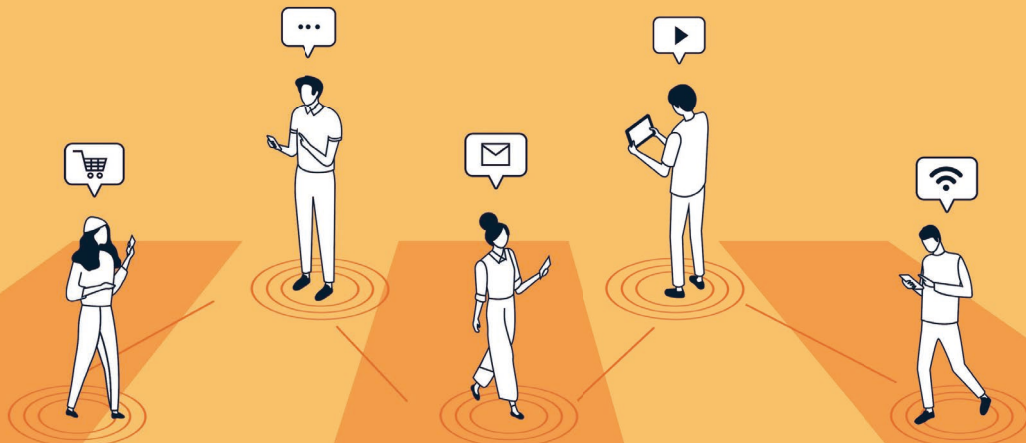
청년 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 포럼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2021. 1. 15. (금) 16:00~18:00

유튜브 생중계(<https://youtu.be/bS1BYY69NyA>)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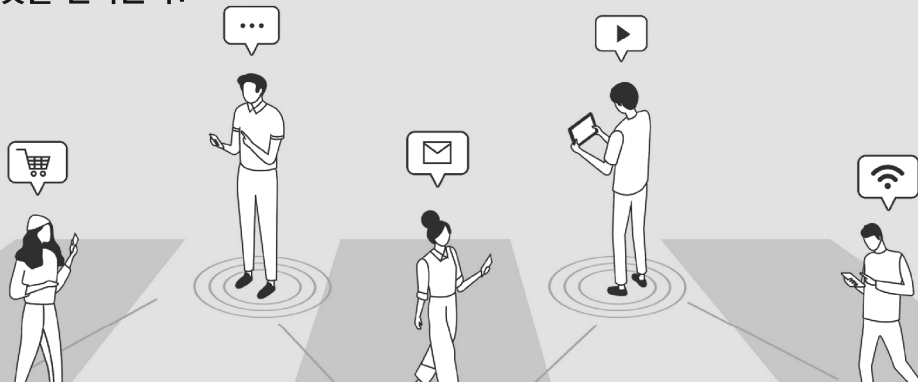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 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 포럼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PROGRAM

❖ 일시 | 2021. 1. 15.(금) 16:00~18:00

❖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bS1BYY69N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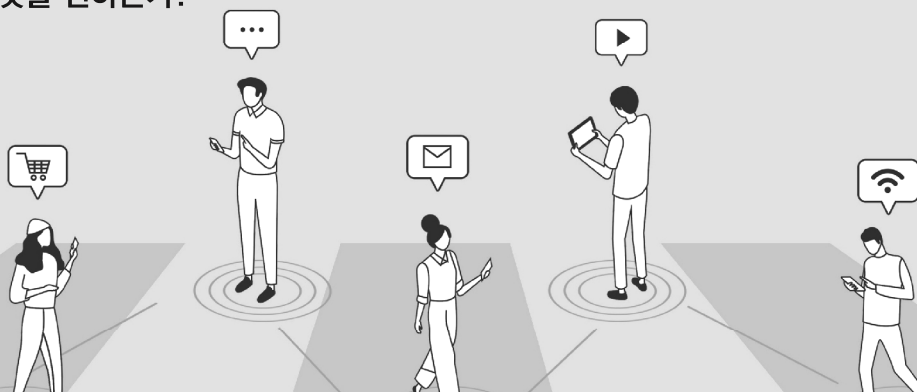
❖ 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사회: **김성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 간	세 부 내 용	
16:00 ~ 16:30	• 주제 발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30 ~ 17:30	좌 장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토 론	김수영 서울대학교 교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영 청년유니온 팀장 조은주 청년실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17:30 ~ 18:00	종합토론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CONTENTS

주제발표

- **청년들의 요구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1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김수영** | 서울대학교 교수 25
2.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31
3. **장혜영** | 정의당 의원 36
4.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39
5. **정보영** | 청년유니온 팀장 41
6. **조은주** | 청년신희추진위원회 사무국장 44

청년 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 포럼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주제발표

청년들의 요구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 기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3차 청년기획포럼 -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청년들의 요구와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2. 04.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청년들의 요구

K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청년들의 요구

01 분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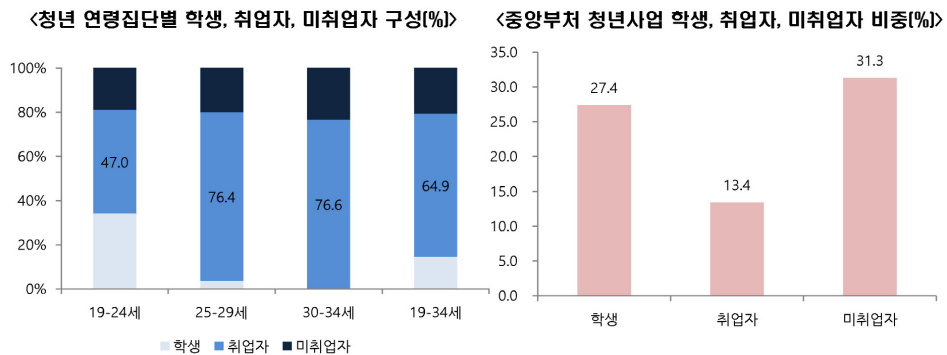
- 1 **청년들의 특성별 분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 2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요건과 충족여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 3 **해외 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 4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국무조정실(2019). 청년정책수요조사(온라인조사)
- 5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수요 변화**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1. 청년들의 요구

02 청년들의 특성별 분포

19-34세 청년 중 취업자가 64.9%로 가장 많고 이어서 미취업자가 20.5%, 학생이 14.6%로 나타남.

2020년 중앙부처 추진 사업 중 미취업자 정책사업이 31.3%로 가장 많고 취업자가 13.4%로 가장 적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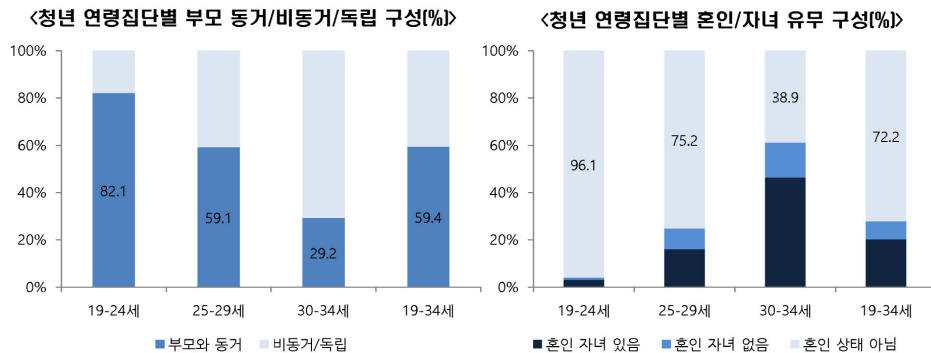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2020)

1. 청년들의 요구

02 청년들의 특성별 분포

청년 중 부모와 동거 중인 경우가 59.4%이며 부모 동거 비율은 30-34세의 경우 29.2%로 낮아짐.

혼인과 자녀 유무를 보면, 미혼/비혼, 무자녀가 72.2%로 다수, 30-34세는 38.9%로 큰 폭으로 낮아짐.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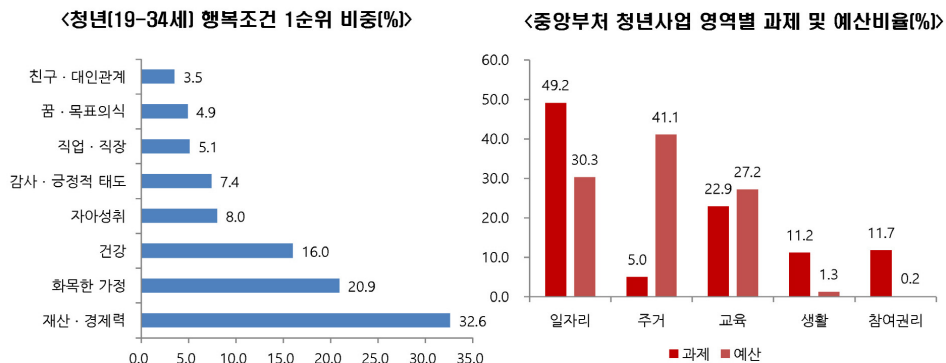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19-34세 행복조건 중 재산·경제력의 1순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직업·직장은 예상 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줌.

중앙부처 청년정책사업 중 일자리 분야는 과제와 예산 모두 큰 편이나 복지, 건강 등 생활분야는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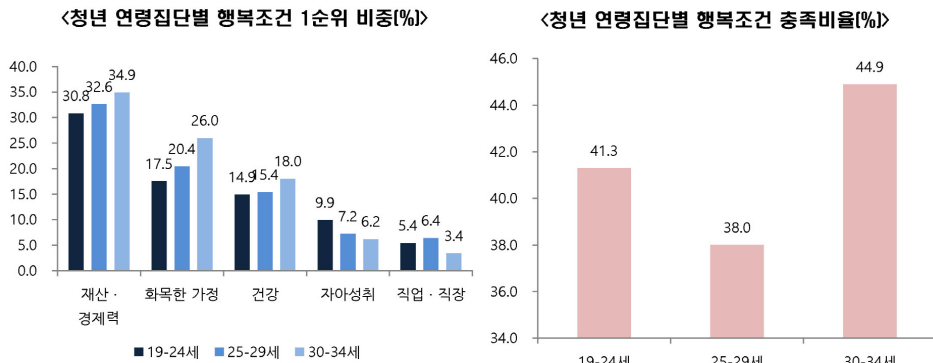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6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연령별로 보면, 19-24세는 자아성취나 긍정적 태도를, 30-34세는 경제력과 재산, 화목한 가정을 중시

1순위 행복조건을 충족(그렇다+매우그렇다)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34세가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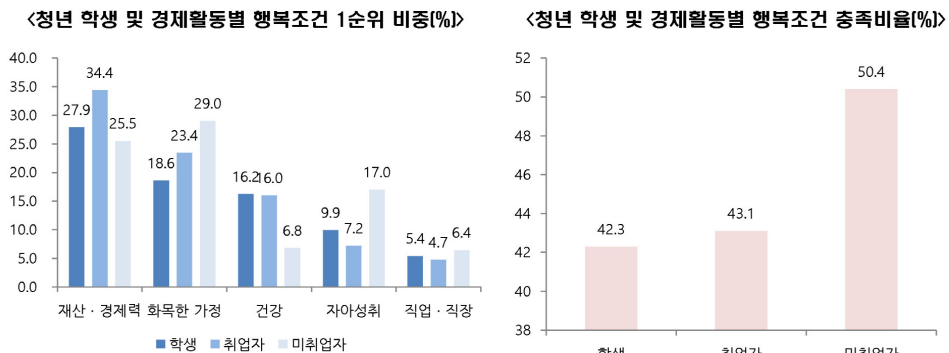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취업자는 재산, 경제력이, 학생은 건강, 자아성취가, 미취업자는 화목한 가정과 직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1순위 행복조건 충족비율은 미취업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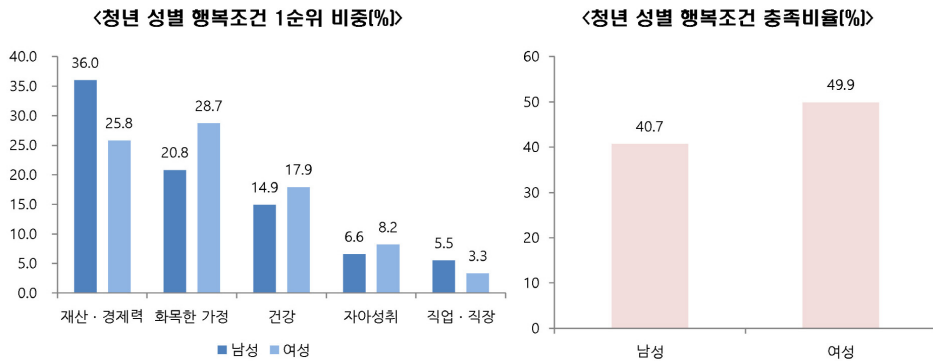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재산, 경제력과 직업, 직장을 중시, 여성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 자아성취 중시

1순위 행복조건 충족비율은 남성(40.7%)보다는 여성(49.9%)이 높게 나타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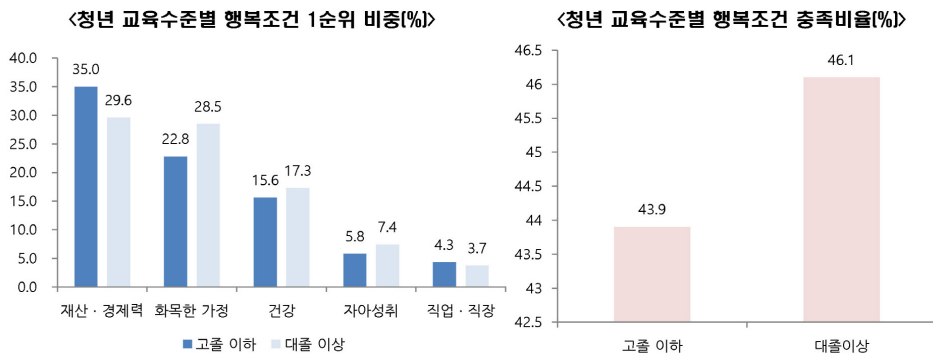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 이하는 경제적인 조건 중시, 대졸 이상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 자아성취 중시

1순위 행복조건 충족비율은 대졸 이상이 46.1%로 고졸 이하(43.9%)보다 높게 나타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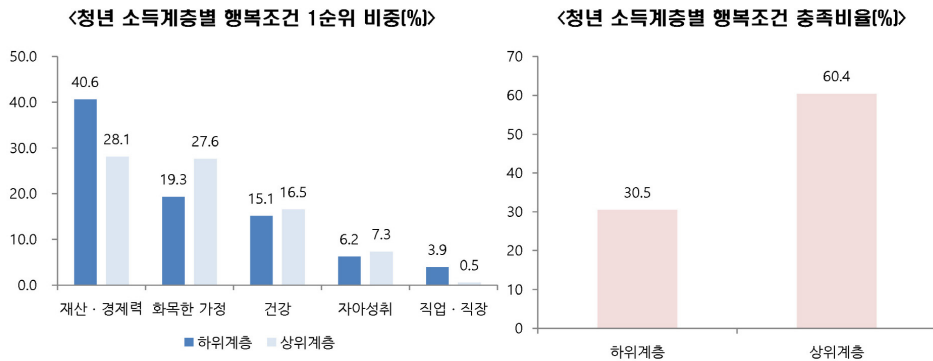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0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소득계층별로 보면, 하위계층은 경제력과 직업을 중시, 상위계층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 자아성취 중시

1순위 행복조건 충족비율은 상위계층이 60.4%로 하위계층의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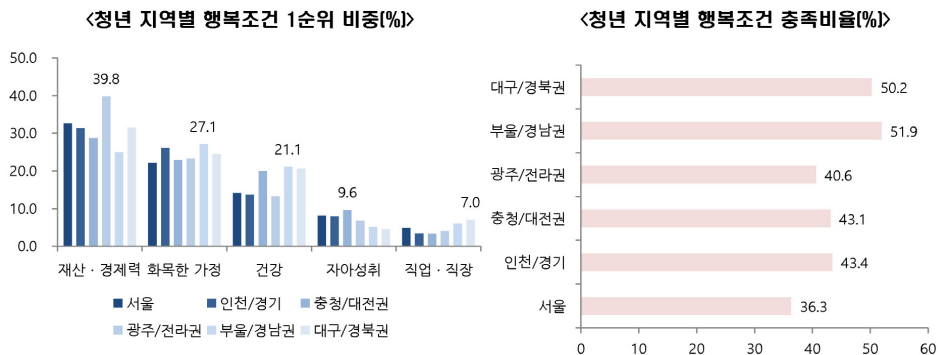
KRISE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1

1. 청년들의 요구

03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과 충족 여부

광주/전라권이 재산, 경제력을, 부울/경남권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을, 충청/대전권은 자아성취를 중시

대구/경북권은 직업, 직장을 중시하고 서울의 충족비율은 36.3%로 가장 낮고 부울/경남권이 가장 높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KRISE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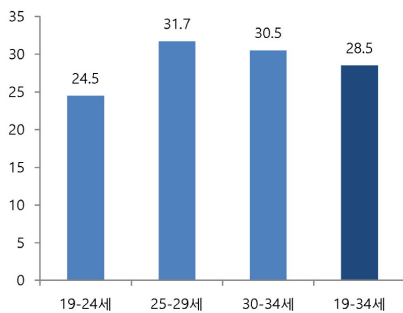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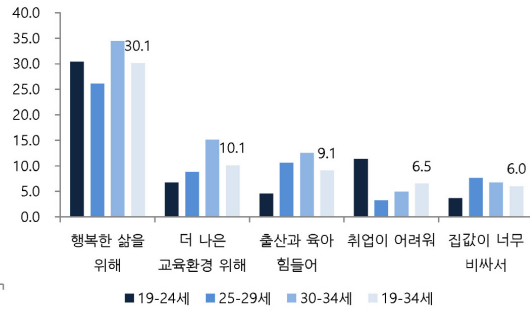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9-34세 중 28.5%가 그렇다고 응답, 25-29세가 가장 높음.

행복한 삶을 위해가 1순위, 30-34세는 교육과 출산, 육아, 19-24세는 취업, 25-29세는 주거가 높음.

〈청년 연령집단별 해외이주 고려비율(%)〉



〈청년 연령집단별 주된 고려 이유(%)〉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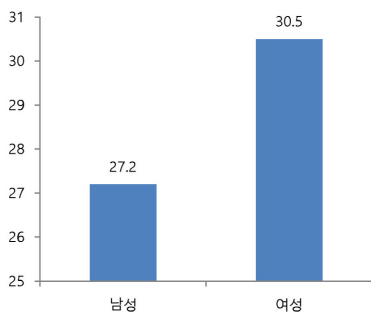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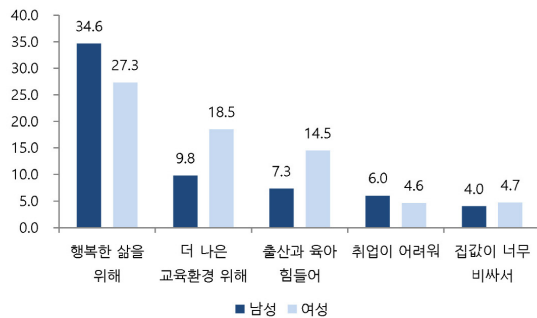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여성이 30.5%로 남성(27.2%)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은 행복한 삶과 취업 문제를, 여성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출산, 육아 문제를 더 고려

〈청년 성별 해외이주 고려비율(%)〉



〈청년 성별 주된 고려 이유(%)〉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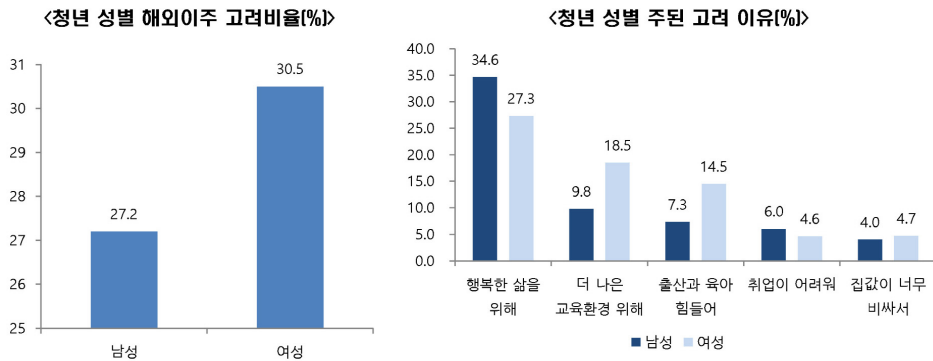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4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여성이 30.5%로 남성(27.2%)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은 행복한 삶과 취업 문제를, 여성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출산, 육아 문제를 더 고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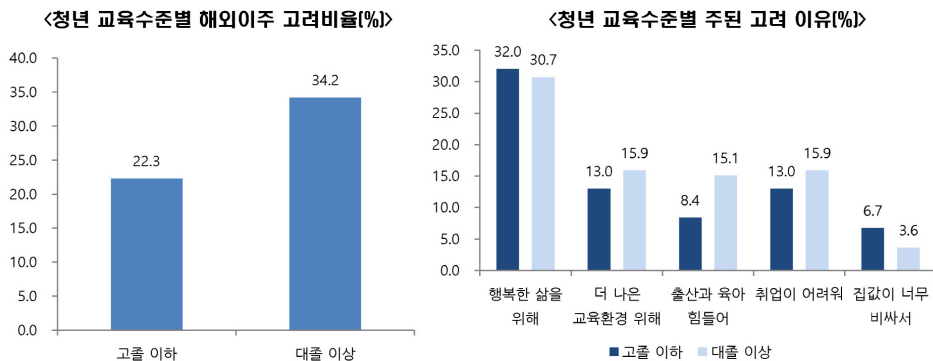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5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대졸 이상이 34.2%로 고졸 이하(22.3%) 보다 높게 나타남.

고졸 이하는 행복과 주거에서, 대졸 이상은 교육과 출산, 육아, 취업문제를 더 고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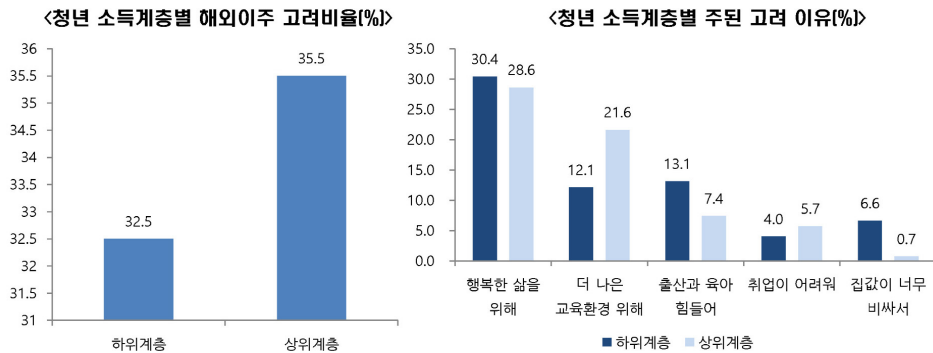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6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상위계층이 35.5%로 하위계층(32.5%)보다 높게 나타남.

하위계층은 출산과 육아, 주거문제에 대해서, 상위계층은 교육과 취업 문제에 대해서 더 고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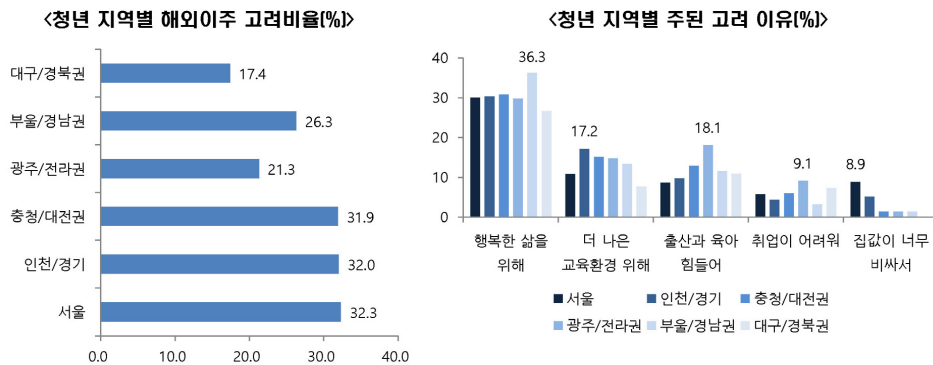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7

1. 청년들의 요구

04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서울이 32.3%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권이 17.4%로 가장 낮음.

서울은 주거 문제가, 인천/경기는 교육 문제가, 광주/전라권은 출산, 육아, 취업 문제를 더 고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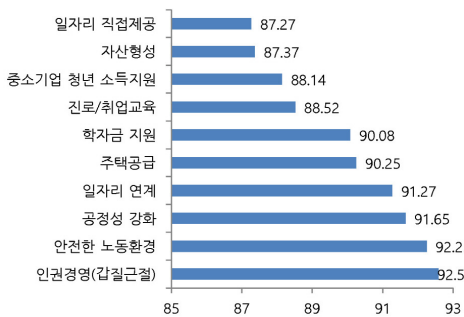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5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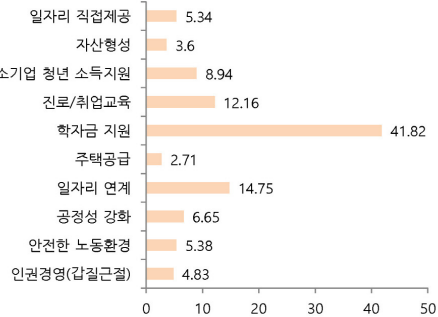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청년 권리 보장으로 갑질 근절,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성 강화 정책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상위 10위 정책 사업 수혜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줌.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상위 10순위(%)〉



〈상위 10순위 정책 수혜율(%)〉



자료: 국무조정실(2019). '청년 정책수요조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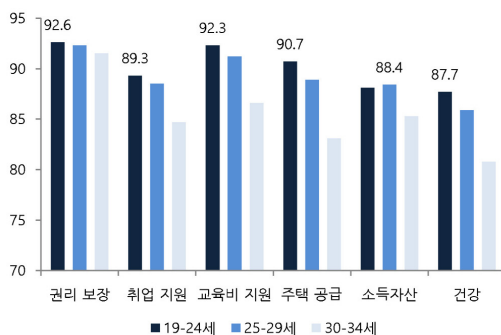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5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연령집단별로 보면 19-24세가 정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소득 자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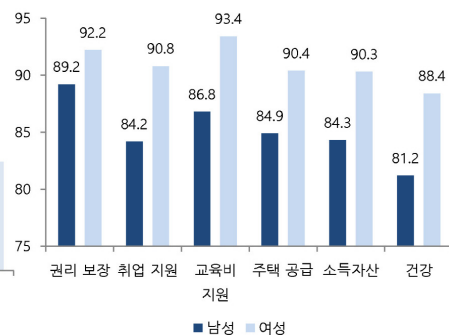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모든 정책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음.

〈연령별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



자료: 국무조정실(2019). '청년 정책수요조사'

〈성별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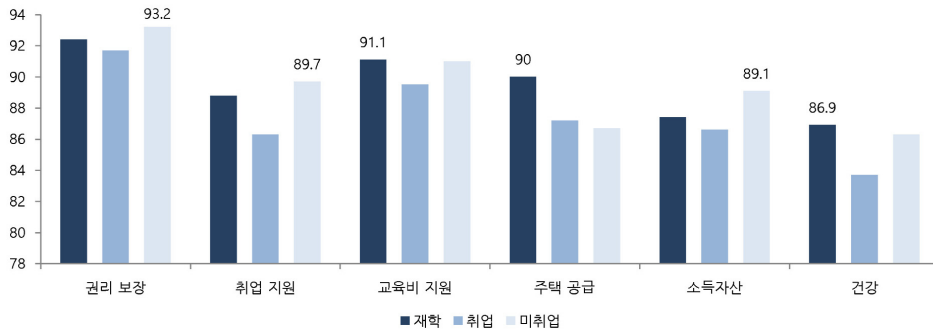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5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권리보장(공정성 강화와 고용 환경 개선)은 취업자(91.7%)보다 미취업자(93.2%)가 더 필요하다고 응답

학생은 교육비 지원과 주택공급, 건강, 미취업자는 취업지원과 소득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재학 및 경제활동상태별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자료: 국무조정실(2019). '청년 정책수요조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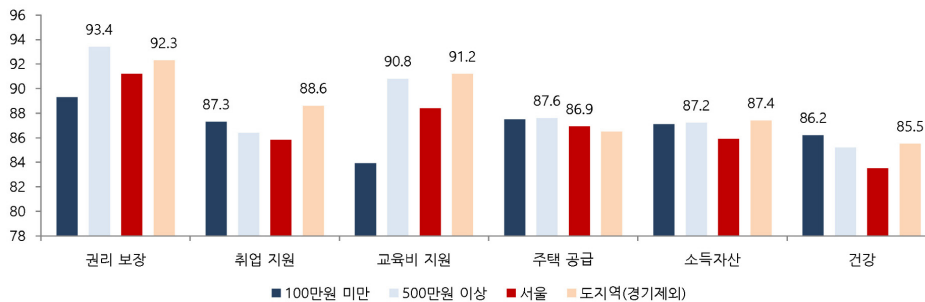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5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00만원 미만은 취업지원 및 건강이, 500만원 이상은 권리 보장, 교육비, 주택공급, 소득 자산이 높음.

서울지역은 주택 공급이,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나머지 영역에 대한 필요성 응답비율이 높음.

〈소득수준 및 지역별 청년정책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 비교(%)〉



자료: 국무조정실(2019). '청년 정책수요조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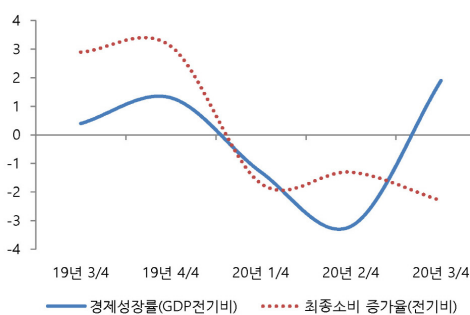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6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수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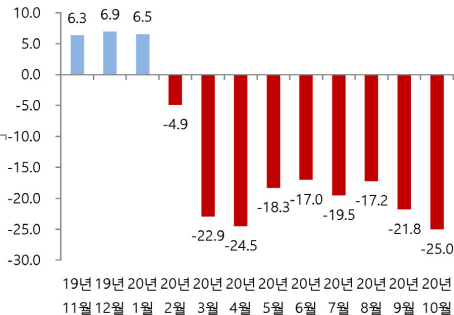
경제성장률이 ¼분기 들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최종 소비 증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취업자는 20년 10월 25만 명 최대폭 감소, 코로나19로 청년 일자리 대응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 및 최종소비 증가율 추이(%)〉



〈청년(15-29세) 취업자 전년대비 증감(만 명)〉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0년 11월 15일 접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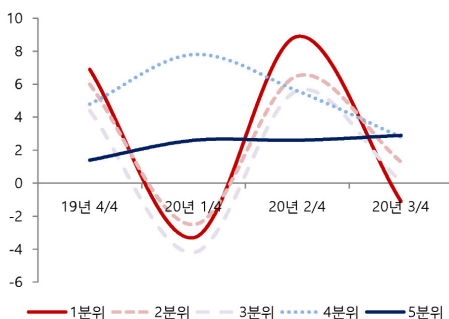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6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수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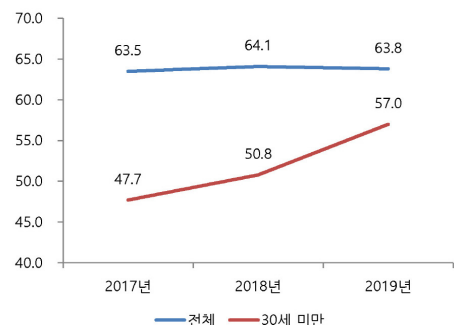
2020년 ¼분기에 이어 ½분기에도 최하위 소득집단(1분위)과 최상위(5분위) 간 소득 격차 확대

2019년까지 청년 부채가 확대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평등 심화에 대한 정책 수요 확대 예상

〈1-5분위별 최근 소득증가율 추이(%)〉



〈청년(30세 미만) 부채보유가구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0년 11월 15일 접속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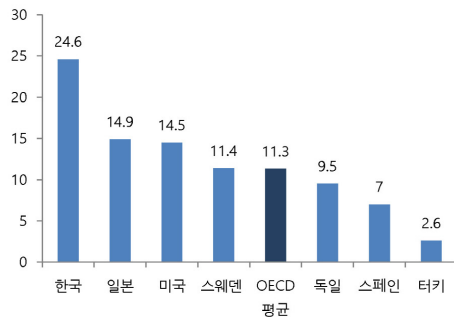
1. 청년들의 요구

06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수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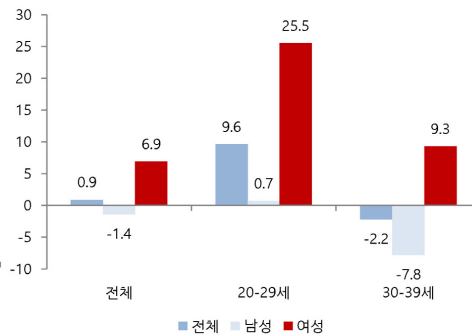
국제적으로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20대 여성 자살이 25.5%나 급증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위험 증가 우려로 청년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예상

〈주요 국가별 최근 기준 자살률 비교(%)〉



〈2019년 전년 대비 자살 사망 증감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국가별 비교는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이며 OECD(2020) Health Status Data 9월 추출 결과임. 단위는 10만 명 당 명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5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1 정책 개념의 확장 - 청년을 둘러싼 환경 개선을 포함

정책대상에
대한 지원

청년
정책

정책대상을
둘러싼
환경 개선

청년정책이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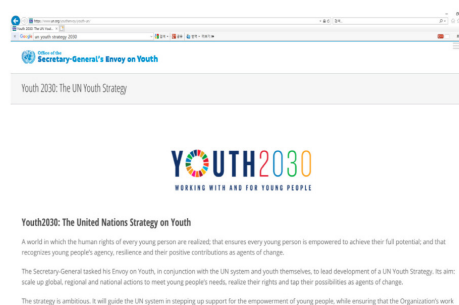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7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1 정책 개념의 확장 - 장기적으로 청년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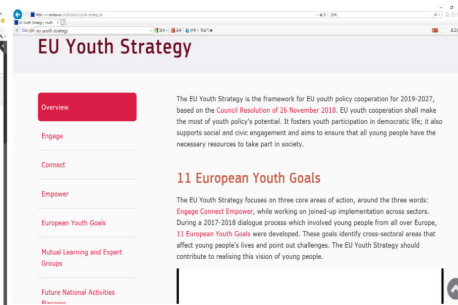
- 국제연합 Youth2030 발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서 기후변화 등 청년이 선도하는 사회정책 추진 강조
- 유럽연합도 새로운 유스 전략에서 사회 참여(Engage), 연계(Connect), 권한(empower) 세 가지 전략 강조

〈국제연합(UN)의 유스2030(2018)〉



자료: <https://www.un.org/youthenvoy/youth-un/>

〈유럽연합(EU)의 유스전략 2019-2027(2018)〉



자료: https://ec.europa.eu/youth/policy/youth-strategy_en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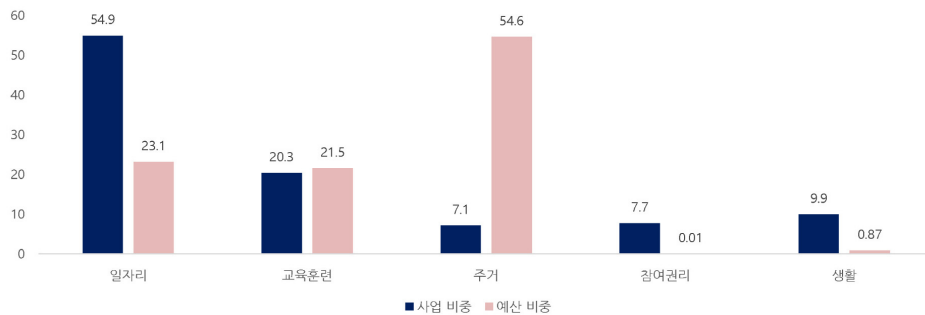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2 청년 내부 다양성 – 대상별, 영역별 균형적 접근 중요

중양부처 5개 영역별 과제 및 예산 분포가 불균형, 생활분야(복지, 건강, 금융) 확대로 대상별 요구에 대응

청년 취업자, 고졸 청년 등 상대적으로 정책 사업이 많지 않는 대상에 관한 사업 확대 필요

〈청년정책분류체계(안) 영역별 과제 및 예산 비중(%)〉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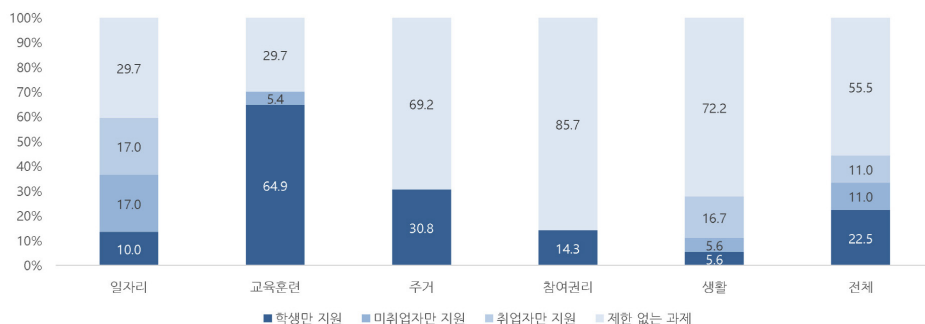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2 청년 내부 다양성 – 대상별, 영역별 균형적 접근 중요

전체 사업 중 학생만 지원하는 경우가 22.5%,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만 지원하는 경우가 11.0%로 나타남.

특정 대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는 참여와 권리로 85.7%가 대상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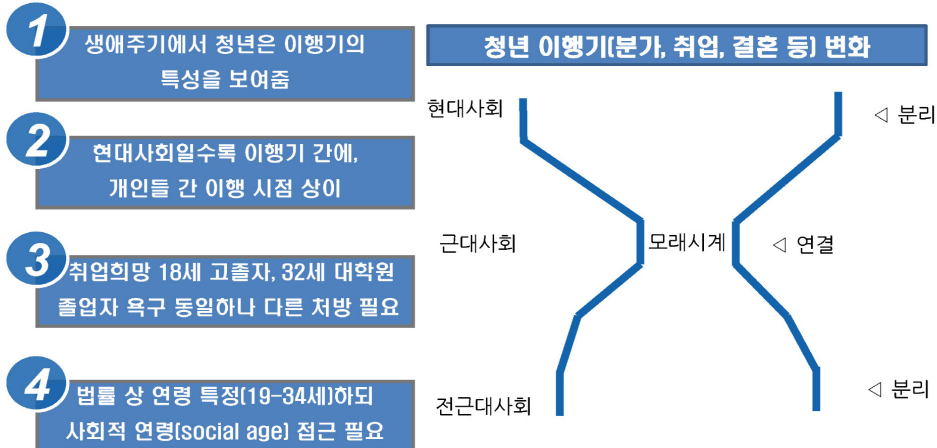
〈중양부처 사업 중 대상별 지원 제한 과제 비율(%)〉



NF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0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2 청년 내부 다양성 – 정책적으로 이행기에 초점 중요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1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2 청년 내부 다양성 – 정책 영역의 확장을 통한 포괄성 확보

권한강화, 건강, 환경, 연계, 활동, 문화와 여가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정책 영역 확장으로 정책 다양성 강화

구분	UN(2030)	EU(2019-2027)	독일(2019)	일본(2010)	스웨덴(2017)
일자리(취업/창업)	○	○	○	○	○
복지 지원(취약계층)	○	○	○	○	○
학습(교육과 훈련)	○	○	○	○	○
건강	○	○	○	○	○
사회 참여(engagement)	○	○	○		○
권한강화(empowerment)	○	○	○		○
환경(기후변화)	○	○	○		
연계(세대, 젠더, 지역)	○	○	○		
활동, 문화와 여가			○	○	○
주거					○
유해환경 보호				○	
비행 및 범죄 예방				○	

자료: 김기현 외(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2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3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 요구에 기반한 정책추진

정책 사업 수와 예산은 취업, 창업, 교육비, 주거비에 집중, 당사자 인식은 낮은 수준(주거비)

필요 수준, 도움 정도가 높은 권리, 건강, 소득 및 자산 등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구분	정책 현황				당사자 인식			
	전체		핵심정책		인지율	수혜율	필요수준	도움 정도
	사업 수	예산(2만)	사업 수	예산(2만)				
평균 이상	취업 교육연수 창업	교육비 취업 주거비 주택공급	취업 교육비 창업 주거비	교육비 주거비 취업	교육비 창업 취업 주택공급	교육비 취업 교육연수	권리 교육비 주택공급 취업 소득자산	교육비 취업 건강 소득자산 권리 창업 주택공급
평균 미만	주택공급 소득자산 권리 참여·활동 교육비 금융 주거비 건강	교육연수 창업 참여·활동 소득자산 건강 권리 금융	주택공급 교육연수 권리 참여·활동 금융 소득자산 건강	주택공급 창업 교육연수 권리 참여·활동 금융 소득자산 건강	권리 금융 소득자산 교육연수 주거비 건강 참여·활동	권리 소득자산 건강 금융 참여·활동 창업 주택공급 주거비	주거비 건강 금융 창업 교육연수 참여·활동	교육연수 금융 주거비 참여·활동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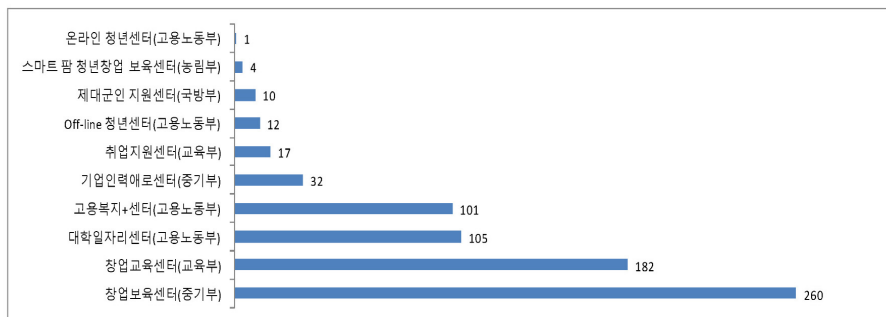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3 정책 체감도 제고 – 전달체계의 정비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필요에 따라 전달체계를 구축 중으로 체계적, 종합적으로 재구축 필요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낮고 이용자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미흡

〈우리나라 중앙부처 청년 관련 전달체계 현황〉



자료: 김기현(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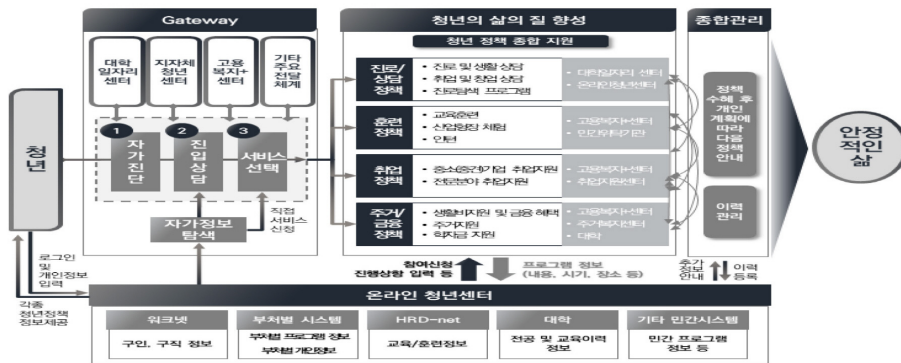
인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4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3 정책 체감도 제고 - 전달체계의 정비

- 청년 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신청과 상담 등 기능 확대
- 오프라인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필요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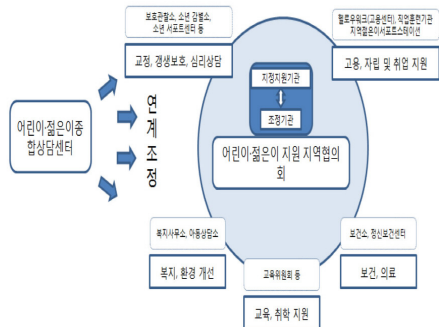
자료: 정동열, 윤동열, 김태환, 오준식(2020).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3 정책 체감도 제고 - 전달체계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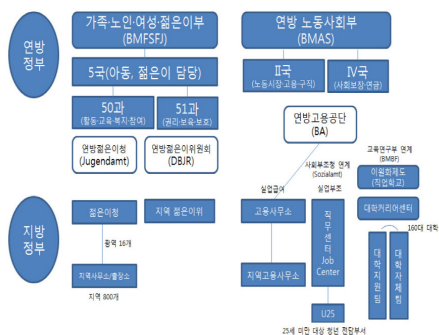
-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일본은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센터 구축
- 독일은 생활 전반을 다루는 젊은이청이 지역까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청년 고용 관련 별도 운영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자료: 김기현(2018)

〈독일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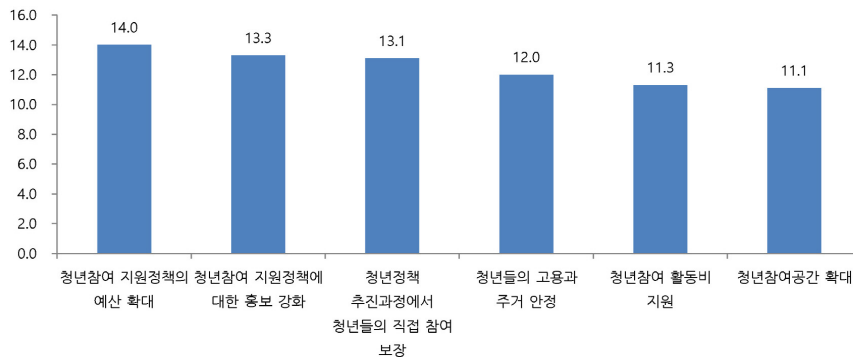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4 청년 권한 강화 – 청년들의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

청년들의 권한 강화를 위해 청년들의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 필요

청년에게 이에 대해 질문할 결과, 참여 예산과 홍보 강화, 직접 참여 보장 등을 1순위로 응답

〈청년 사회,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응답분포(%)〉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KRIS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7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4 청년 권한 강화 – 청년 참여기구의 정비

지역 총화/권한 강화 형태의 참여기구 운영

[추진 배경] 정책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보편적이고 대표성 있게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상태

[추진 방식] 중앙정부로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총화 하는 기능(EU의 구조화된 대화)과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능(온라인으로 각종 제안과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통로)을 반드시 갖춘 형태로 참여기구 구성, 동시에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한 검토 대상이 아닌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참여예산제 형태(서울시 자율예산제)로 운영해 권한을 강화

[세부방안 마련]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과 관계부처에서 세부추진방안 마련

유럽연합의 구조화된 대화 운영 추진체계



자료: 김기현, 이윤주, 최정원, 유설희(2018)

KRIS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8

2.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04 청년 권한 강화 – 참여예산제(자율예산제) 도입

1

청년들의 단순 의사표현이 아니라 결정 권한 강화 필요

2

실질적 권한 부여와 관련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청소년참여예산제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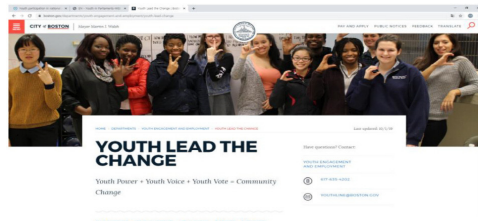
3

보스턴시처럼 청(소)년예산 중 일부를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추진 확산 필요

4

서울시에서는 자율예산제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을 시와 의회에서 승인해 추진

보스턴시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Youth lead the Change)



▶ 미국 보스턴 시 Youth Lead the Change 프로젝트는 2014년 1월 처음으로 청소년 참여예산제로 도입됨. 12세~25세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며 보스턴 시 예산 중 약 1백만 달러(약 11억원)를 이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함. 제안한 사업안들은 투표로 결정되며 가장 다수의 표를 획득한 사업안을 시에 건의하고 시의회에서 최종승인에 정책사업으로 추진함..

자료: <https://www.boston.gov/departments/youth-engagement-and-employment/youth-lead-change>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9

감사합니다

N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 포럼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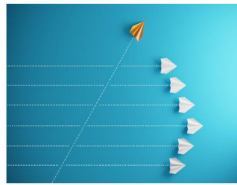
좌장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 김수영 서울대학교 교수
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3. 장혜영 정의당 의원
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5. 정보영 청년유니온 팀장
6. 조은주 청년실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제3차 청년 기획연속포럼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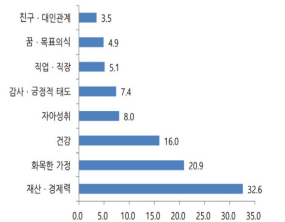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토론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청년들의 요구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조건: 1위 재산·경제력 vs. 6위 직업·직장, 7위 꿈·목표의식, 8위 친구·대인관계

- ① 직업, 꿈과 분리된 경제적 자본 축적의 욕구
- ②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

〈청년(19~34세) 행복조건 1순위 비중(%)〉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 경제 실태조사'

발표문 6쪽

조선비즈

'빚투·영끌' 2030 소득 대비 부채 비율, 50대 앞질렀다

올해 들어 2030세대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0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빚을 내 주택매수와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빚투·영끌' 행렬을 ...

2주 전

머니투데이

"월급만 오오다간 벼락거지"...'빚투' 2030 영끌대출 32조

올해 빚투·영끌 열풍을 주도했던 2030대가 1년새 대출을 32조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일만하다가 '벼락거지'들 ...

임웅 뉴스 2주 전

대학대입기

'영끌 빚투'에 돌린 2030...가계빚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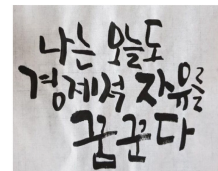
<대입대입기>영원선 기자> 올해 2020 청년세대의 가계대출이 다른 연령층을 압도했다. 영끌 빚투로 일하는 주식투자, 주택 구입, 전월세 수요 등으로 ...

2주 전

청년 가계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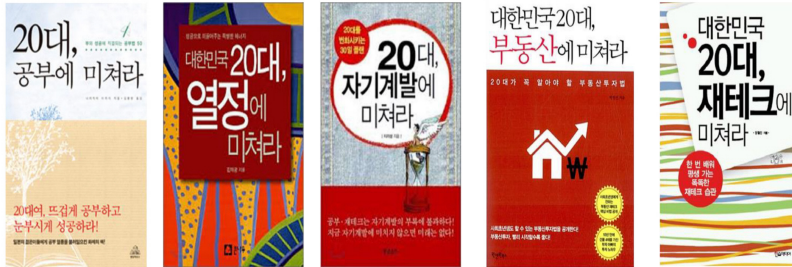
연도	2019	2020	2021
19~24세	10.1%	12.1%	14.1%
25~34세	11.1%	13.1%	15.1%
35~44세	12.1%	14.1%	16.1%
45~54세	13.1%	15.1%	17.1%
55~64세	14.1%	16.1%	18.1%
65세 이상	15.1%	17.1%	19.1%

(단위: 백만원)



청년들의 요구

오늘날 청년은 어떤 방향으로 내몰리고 있는가(Boys, be ambitious for what)?



- 노동 중심의 산업자본주의에서 **자본 중심의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
- 삶의 경제적 도구화: '경제적 자유'라는 프레임에 자신의 삶과 영혼을 거는 상황

청년들의 요구

실제로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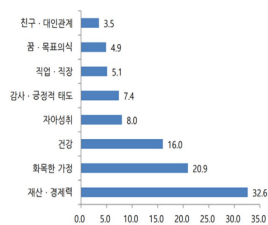
- **꿈-자본이 현격히 부족한 청년세대: 생존세대**
한국 청년세대 꿈-자본 측정(김석호 외, 2017)
꿈-자본(미래를 상상하는 힘, 희망의 감정을 품는 힘,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힘, 난관을 이겨가는 힘)의 중요성
- **친구·대인관계는 행복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 조건**
Connected: 행복은 전염된다(크리스태키스 & 파울러, 2010)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만 2067명 추적
- **수요자 욕구실태 조사 기반 사회정책의 딜레마**
현재의 욕구와 미래의 욕구의 차이
인식과 실재의 차이
욕구의 유예가 가져오는 결실로서의 행복



청년들의 요구

청년들이 원하는 것과 청년들이 '정책'에서 바라는 것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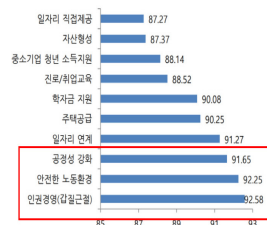
〈청년(19~34세) 행복조건 1순위 비중(%)〉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발표문 6쪽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상위 10순위(%)〉



자료: 국무조정실(2019). '청년 정책수요조사'

발표문 19쪽

- 청년들의 실육구와 정책육구의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 인지부조화?, 정의에 대한 추상적 요구?
 -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음: 공공성**

청년들의 요구

사회정책이 항상 수요자의 즉각적 요구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원칙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동일노동 동일임금): 중소기업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 좋은 사회정책은 (개인 차원에서는) **생애주기 전체의 욕구**를 고려하며,
(사회 차원에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연대**를 추구한다.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부상
시장의 원리: 고객 만족도, 이용자 체감도가 성과가 되는 공공정책
인기 영합의 정책 포퓰리즘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까?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정책 개념의 확장

① 오늘날 청년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책 마련(생애사적, 시대사적 청년의 지위)

생애사적 청년정책: 취업, 교육비, 소득자산, 주택공급, 권리보장, 건강 등

시대사적 청년정책: 환경(기후변화), 연계(세대, 젠더, 지역), 인권(권한강화) 등

② 청년의 단계적 요구와 맞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이행을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정책

맥락적 정책: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현대사회의 구조(정치, 경제, 사회, 문화):

③ 청년의 수요조사를 확장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 전체의 토론과 합의 필요

재분배 정책: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자원(경제, 사회, 문화, 상징, 꿈자본)이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와 구상
당사자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간 공론장 확대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청년정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는 낮고 이용자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미흡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정비, 청년 권한과 참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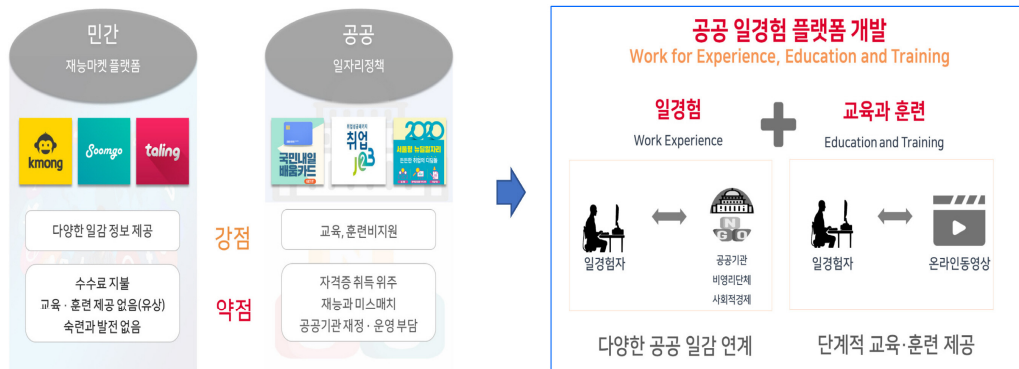
청년들에게 현재의 청년정책과 전달체계가 낯설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 **아날로그 관점의 정책과 전달체계**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청년에게 익숙한 전달체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제안 1: 일자리 검색 위주 워크넷 →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공공 플랫폼화



청년 수요 기반 정책의 방향과 과제

청년 정책참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제안 2: 디지털 권한강화(Digital Empower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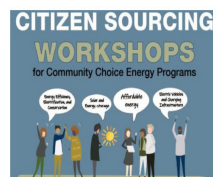
• 청년에게 잠재해 있는 디지털 파워

- 쌍방향 소통의 web 2.0, web 3.0에 능숙
- 웹과 앱에 익숙하며 개발 능력 보유
- 네트워크적 사고와 파급력



• 국가 정책의 조정국가(steering state), 능력개발국가(enabling state) 역할의 실패

• 시민소싱(citizen sourcing), 시빅해킹(civic hacking)



감사합니다!

토론 2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1. 들어가며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 연속 기획 토론회는 1차 포럼 『한국 청년, 어떻게 살고 있는가?』, 2차 포럼 『한국청년, 어떻게 생각하는가?』을 통해 한국 청년들의 삶을 진단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포럼에서는 『한국 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청년들의 구체적인 정책적 니즈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의 큰 주제를 완결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주제인 『한국 청년, 무엇을 원하는가?』는 청년정책의 성공 여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청년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혜자인 청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나오며, 정책적 수혜자인 청년의 정책 수용성과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다.

청년 수요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책 형성 과정부터 청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청년기본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청년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대상과 참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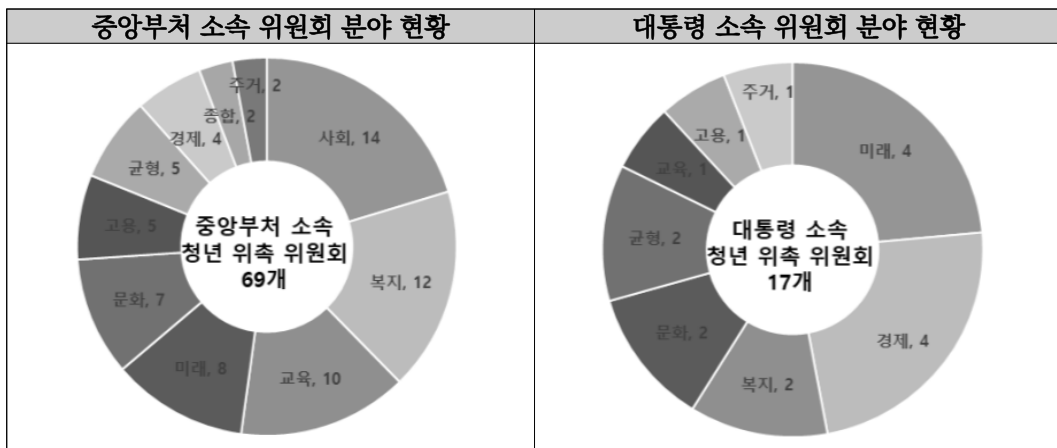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3조) 참여,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4조)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속 위원회(제15조) 참여와 청년정책책임관 지정(제16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소속 위원회의 청년 위촉의 확대를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청년정책책임관을 통해 청년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에 대한 방법과 범위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에 규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의 청년위원 위촉 의무는 ▲ 조정위원회 : 2분의 1 이상, ▲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는 비율이다.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09.18)에서 일자리·교육·주거 등 청년 삶의 관련성, 신기술·신산업 분야, 미래세대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청년참여 위원회)를 선정하였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청년 참여 위원회) 분야별 현황〉



청년참여 위원회 선정현황을 보면, 종합, 사회, 복지, 교육, 미래, 문화, 고용, 균형, 경제, 주거에 대한 분야로 위원회를 구분하고,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 69개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 17개를 청년참여 위원회로 선정되었다.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는 사회 분야 14개, 복지 분야 12개, 교육 분야 10개, 미래 분야 8개, 문화 분야 7개, 고용 분야 5개, 균형 분야 5개, 경제 분야 4개, 주거 분야 2개, 종합 2개로 실무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부처의 특성을 살려 사회/복지/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미래 분야 4개, 경제 분야 4개, 복지, 문화, 균형 분야 각각 2개씩, 교육, 고용, 주거 분야 각각 1개씩 구성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와 거시적 경제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소관부처별 청년 참여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14개가 선정되는 등 청년기본법 주관 부처인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독보이며,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기재부, 농촌진흥청, 법무부, 통계청, 행안부는 각각 소속 위원회 1개 선정되어 정책 실무 부처에서 소극적인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총 135개의 위원회에서 180여 명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35개 청년 위촉 위원회는 전체 행정기관위원회 585개¹⁾ 중 23% 수준이며, 청년 위촉 위원회 69개 전체 위촉직 정원의 12%(1,604명 중 180명)에 불과한 수준에 있다.

〈부처별 청년 위촉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계획〉

소관부처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현황
국토 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2년 5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10월)
	적극행정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9월)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4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2년 2월)
	도시농업협의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2년 7월)
	동물복지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2년 6월)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위촉완료(1인)
보건 복지부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재위촉 시 20% 위촉 예정(21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재위촉 시 10% 위촉 예정(22년 2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재위촉 시 10% 위촉 예정(22년 9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재위촉 시 10% 위촉 예정(21년 9월)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6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7월)
교육부	국가산학협력위원회	위촉 완료(2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6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촉 완료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재위촉 시 10% 위촉 예정(22년 7월)
	학습계좌자문위원회	위촉 완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 완료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2월)
농촌 진흥청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2년 3월)
	적극행정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9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재위촉 시 1인 위촉 예정(21년 4월)

1) 행정안전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현황 조사자료」

각 부처별 소속 청년 위촉 계획²⁾을 보면, 민간위원 재위촉 시기인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에 청년위원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즉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 주 담당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와 청년 위원 위촉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강화 기조를 고려한다면, 청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는 광역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2021년 4월 이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분야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에 필요한 시·도 소속 청년 위촉 위원회 심의·지정 및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은 부족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청년 위촉 위원회 지정 현황〉

항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현황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현황	청년 위촉 위원회 심의·지정 여부
	위촉직 위원 수	청년위원 수	청년 위촉 비율		
강원도	13	5	38%	○	X
경기도	42	23	55%	○	X
경상남도	15	9	60%	○	X
경상북도	14	8	57%	○	X (21년 상반기)
광주광역시	16	6	38%	○	X
대구광역시	14	8	57%	○	X
대전광역시	22	12	55%	○	○
부산광역시	18	9	50%	○	X
서울특별시	15	8	53%	○	X (21년 중 예정)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미구성			○	X (21년 4월 이후)
울산광역시	11	9	82%	○	X
인천광역시	15	10	67%	○	X
전라남도	28	20	71%	○	X
전라북도	13	7	54%	○	X
제주특별자치도	17	9	52%	○	X
충청남도	11	7	63%	○	X
충청북도	14	9	64%	○	X
소계	278	159	57%		

2)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5개 부처를 선정하여 자료를 살펴봄

2020년 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 시·도 단위의 청년위촉 위원회 심의·지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빨리 진행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청년정책 위원회,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협동조합지원 심의위원회,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식생활교육 위원회, 새로운 대전 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위원회,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 10개의 위원회를 청년 위촉 위원회로 지정하였다. 즉 주거, 경제·금융·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아직 청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3. 결론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실행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서 청년위원 위촉 위원회 지정에서 청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힘들게 끼워 맞추는 바람에 해당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는 청년이 아직까지 배제되어 있다는 인상을 갖을 수밖에 없다.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 주거, 문화, 사회구조, 금융·경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추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대해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아직 청년위촉위원회 심의 지정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청년위촉 위원회 심의·지정을 한 대전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에서 시·도에서 청년위원 위촉 위원회를 심의·지정할 시 거, 경제·금융·문화 등 청년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위원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위촉 위원회로 지정되어 청년위원 위촉 계획을 갖고 있지만, 기존 위원회의 잔여 임기 때문에 실제 위촉 시기가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즉 2020년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청년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이행은 2022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임시적으로 청년위원 위촉을 위한 민간 위원 정원 확대, 결원 발생 시 청년위원 우선 위촉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에 대한 추진 원칙은 ‘공정’이어야 한다. 청년위원 할당 위원 선발시 공개모집, 투명한 심사 절차 등을 통해 해당 위원회에 적합한 청년이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 3

장혜영 정의당 의원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1년여의 기간은,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다. 특히, 재난 앞에서 먼저 무너져 내리는 삶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었다. 청년 세대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이 겪은 정확한 피해에 대해 실태 파악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청년들의 정책 수요 변화를 다루고 또한 기존의 고용과 주거에만 한정됐던 정책 방향을 행복 조건과 건강 등으로 확장한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비수도권 거주', '비 4년제 대학 출신 구직자',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청년들의 삶을 살펴보고, 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발제에서 이미 많은 논의와 시사점을 주었지만, 토론을 통해 추후 우리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에 관해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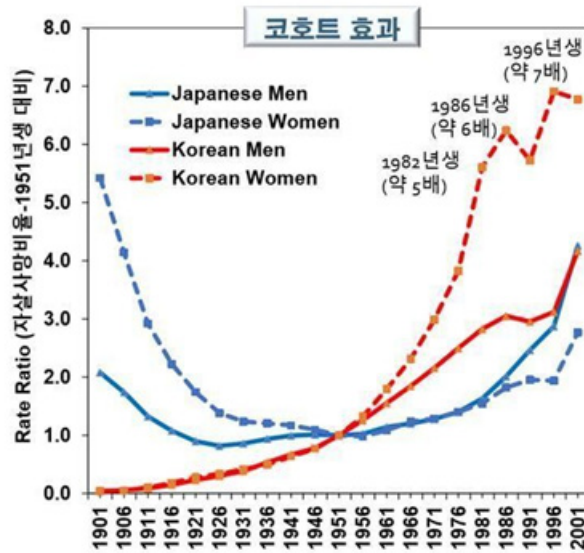
발제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분류체계(안) 영역별 과제 및 예산 비중> 통계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주거 정책에 54.6%, 일자리 정책에 23.1%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즉, 정부의 청년 정책은 '고용'과 '주거'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고용과 주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점이 청년 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발제 내용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청년들은 성별, 출신지, 최종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코로나19 속 청년 더 이상 시간이 없다' 토론회에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 상황(청년수당 참여자 중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있는 청년 중 이틀간 식사하지 않고 일주일간 외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한 결과 다수가 겪는 어려움이 모두 개별적이고 층위가 다양해서, 기존의 주거나 취업 분야의 정책 자원을 연결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담당자는 "107명의 고립청년 중 센터가 만난 청년은 단 13명뿐이었고,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알 수 없다"라며,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촉 기회를 넓히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즉, 다양한 청년 삶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정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졸 비진학 청년이나 비수도권 거주자 청년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들의 삶은 다양하다. ‘연령대’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모든 청년은 각자만의 삶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삶,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실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청년들, 특히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여력이 없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실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단순히 의제 발굴의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또한 정책 시행 이후 모니터링 과정까지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발제에서 제시한 일본과 독일, EU의 청년 정책 전달체계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재욱 부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 취업, 교육 훈련에서 부정적 경험을 겪는 경우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관계의 단절 등 관계 요인, 미취업 자체보다 미래의 직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판단인 주관적 요인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20대 여성 자살 증가율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다. 그중 19세~34세 여성 환자는 1년 사이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10월 발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도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에서 20대 여성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림 1] 한국·일본 남녀의 출생연도별 자살의 비례사망률. 연령 및 기간 효과를 보정한 수치로 기준은 1951년생을 기준으로 한 비례사망률임. 장숙량 중앙대 교수 제공

전문가들은 20대 여성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용한 학살’로 칭한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감정의 동요’, 혹은 ‘감정 변화에 예민한 청년 여성들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청년 세대가 겪었던 노동조건과 주거 문제에 더해 여성들이 겪는 젠더폭력과 생활 전반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자, 사회적 문제인 셈이다. 이처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분석과 정책을 통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선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 1차, 2차 포럼에서는 ‘한국 청년,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국 청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3차 포럼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청년들이 어떠한 복합적 문제를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1차, 2차 포럼에서도 강조하였듯, 청년 정책은 ‘실제 청년들의 삶’을 향해야 한다. 약 7개월에 걸쳐 진행된 <2020 한국 청년을 말하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4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년없는 청년정책’에서 ‘청년있는 청년정책’으로

지난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청년문제라고 하면 주로 ‘청년실업’이라는 일자리 이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청년 관련 법률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만이 존재했던 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문제로서 바라보았다는 것에서 일차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청년 발전’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청년의 권리보호 확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청년정책 수립은 청년에 대한 수혜적 지원이 아닌 청년이 기본적 ‘권리’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청년들의 요구가 청년문제로 공론화되고 정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정책방향성 설정의 문제,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국가 단위 장기사업계획의 부재 등이 그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과 ‘청년문제’이라는 이슈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였습니다. 청년의 문제를 기성 세대의 관점에서 노력의 문제로 낮추어 보는 듯한 ‘N포세대’, ‘노오력’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는 ‘청년은 약자’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단순히 청년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요구가 모여져서 공론화되고 정치권까지 반영되면 결국에는 기성세대인

정책결정권자가 이슈를 검토하여 정책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문제는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선택적으로 정책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년정책’까지 이어진 경우더라도 ‘청년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며 청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한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재해석되어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국가 차원의 장기사업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을 정하여 통일되지 않거나 조례의 한계로 인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정책수립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빠져있던 점의 영향이 컸습니다. 즉 ‘청년없는 청년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은 ‘청년있는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들이 정책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로가 공식화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청년이슈가 청년의 권리와 참여를 기반으로 정책까지 이어지기 용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청년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청년정책이 일자리면 일자리, 주거면 주거, 교육이면 교육 개별 분야가 단절되어 부처별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큰 하나의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목표를 중심에 두고 각 분야별 정책이 큰 정책목표로 융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정부는 2021년에 시행될 270개 정책을 포함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첫째,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단기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5년을 내다보는 청년정책의 첫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그간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을 뛰어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임.

셋째, 정부 위주 수립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청년정책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중요한 해입니다. 저 또한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 중심의 청년정책, ‘청년있는 청년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토론 5

정보영 청년유니온 팀장

청년정책, 더 너르게 더 가깝게

‘청년의 요구’와 ‘청년정책’ 사이

- 발제문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19~34세 청년 인구를 특성 분포와 청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요건과 충족여부, 해외 이주에 관련한 생각, 정책수요 등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수요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고 있음.
- 발제문이 지적하고 있듯 청년의 정책수요는 성별과 연령, 취업여부, 고용형태, 소득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정책수요가 곧 정책의 우선순위로 직결되기에는 무리가 있음.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실제 정책 사이에는 담론과 정치가 단계가 개입하기 때문임.
- 따라서 수요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사실은 청년이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변화, 즉 정책 필요도의 변화임.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앞서 청년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를 미리 고민할 수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지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건강’ 항목은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상위 10순위’에 들지 못했으며(19), 다양한 특성으로 나누어 보아도 취업지원이나 권리보장 주거 등의 영역보다 그 수요가 낮게 측정됨(20-22).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신체·마음 건강 정책의 필요성이 낮음을 의미하지 않음. 건강관련 정책은 청년정책 내에서도 비교적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서울시의 -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화하게 되는 담론적 분위기 속에 수요도가 높아질 수 있음.
- 결국 때로는 높은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등, 정책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치적인 과정도 필요함.

- 발제문에서는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 청년정책을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정책으로 추진할 것과 △ 청년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포괄성을 추구할 것 △ 전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정책체감도를 높일 것 △ 청년의 참여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19와 청년 정책 - 넓혀야 할 정책과 좁혀야 할 정책

-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0만 명, 취업성공패키지는 20만 명에게 지급되었고, 추경을 통해 20만 명에게 특별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되었음. 그러나 특별구직활동금을 기존에 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미취업 상태인 청년에게 우선 지급하면서 제도가 포괄하는 인원은 50만 명이 되지 않음. 이 때문에 새롭게 일자리를 잃고 구직자로 전환한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정책이 닿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축소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은 추경 이전의 2020년 예산이 그대로 유지(구직활동지원금), 축소(취업성공패키지)된 상태로 편성되었음. 서울청년유니온에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아르바이트 실직자 실태조사>에서 면접 참여자들은 실직 이후 모아놓은 돈을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필수적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모아놓은 목돈이 소진되는 시기, 군대에 있던 청년들이 제대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시기, 대외활동이 대부분 취소되는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미룰 수 없이 졸업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노동의 문제는 지금부터가 본격적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대상의 범주를 넓혀 더 많은 재정을 구직지원, 직업훈련, 일자리 사업에 투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책의 대상을 좁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함. 예를 들어 발제문에서는 청년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하나로 취업자/미취업자/학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상태가 존재할 수 있음.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각각의 이행시점과 이행과정은 각자가 놓인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직장갑질 119의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직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상용직의 4%만이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반면 임시직은 20.8%, 일용직은 44.0%가 실업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임.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수급률이 매우 떨어지지만, 상용직의 66.7%

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비상용직은 78.1%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앞서 언급한 서울청년유니온의 조사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실직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9.8%만이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응답함. 고용보험으로 포괄되지 않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영세사업장의 실직자,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채울 수 없는 초단기간 노동자 등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청년 참여제도에서 먼저 고민되어야 할 것

-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의 설계는 참여의 차원에서도, 정책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참여는 문을 연다고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가장 먼저,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작업들이 동반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시간대에도 시간과 자원을 지불할 수 있는 청년으로 참여 대상이 한정되면서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어 고립, 니트 청년은 스스로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각종 참여 행사가 오후 시간대에 진행된다면 9~6시 출퇴근을 하는 청년은 참여할 수 있는가.) 실제로 2020년 청년정책참여단이 대부분 대학생을 구성된 바 있어 어떻게 더 다양한 청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청년정책이 논의되는 장에서 청년은 자주 ‘당사자’로 한정되며 ‘전문가’와는 구분지어짐. 참여제도가 청년의 당사자성을 소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하는 청년을 현장경험을 가진 청년문제의 당사자-전문가로서 인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내가 경험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청년 참여예산제’와 예산이 청년이 제안하여 만들어지는 정책을 담보하지 않음. 현행 청년참여예산 제도에서도 제안된 정책이 수정·보완과 숙의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이유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는 경험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또한 1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본 부처로 예산이 옮겨져야 정책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실태조사와 같은 1회성 정책만 받아들여지는 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여 실질적인 참여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함.

토론 6

조은주 청년신흥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격차사회, 삶의 격 : 우리는 존중받는 삶을 원합니다.

“일상화된 격차,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에서의 생존주의 전략”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인해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는 152만3,000원으로 지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의 격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에게나 통용되는 말일 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상태의 노동시장에서는 기본원칙이 아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다.

또한, 학력 임금 격차 역시 심각하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교 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며, “대학진학 과잉사회”로 진입했다. 대학교 졸업장이 취업을 담보하지는 않지만, ‘학사학위는 무조건 있어야 기본 밥벌이는 하고 산다.’는 인식은 그만큼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9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 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3,532만 3천원으로 1.4배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는 30~99명 사업체의 경우 학력 임금격차가 1.7배, 100~299명 사업체의 경우 1.7배, 300~499명 사업체의 경우 1.75배, 5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1.42배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분명함을 보여준다.

앞선 정규직-비정규직 간,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 간에도 격차는 존재한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천장인 남녀 임금격차는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며, 매년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임금격차는 단순히 ‘차이’가 아닌 ‘차별’이라는 점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격차, 소득격차를 야기하는 것이 단순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쟁력이 되는 세습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자산과 소득을 이전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은 출발선 자체가 애초부터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이행기를 지나 장년, 노년의 불평등과 빈곤문제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자산으로 인한 세대 내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연구해온 서강대 이철승 교수의 “세대 간 자산불평등의 형성과 이전, 1990~2016”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40대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으로 인해 귀속임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70대 이상 노년층 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층의 공적 복지에 대한 선호가 자산의 소유에 따라 격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1〉 1990년 이후 귀속임대소득이 많은 세대

	나이(세)	귀속임대소득(원)
1990~1994년	55~59, 60~64, 65~69	64만9000~66만8000
1995~1999년	60~64, 65~69, 70~74	75만5000~81만2000
2000~2004년	60~64, 65~69	78만9000~84만3000
2005~2009년	45~49, 50~54	69만5000~70만7000
2010~2014년	35~39, 40~44	78만4000~80만3000
2015~2016년	35~39, 40~44	82만7000~84만1000

※ 귀속임대소득(월세평가액)=자가주택에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면서 얻는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월 임대료로 환산한 것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출처: 경향비즈, 젊을수록, 늙을수록 세대 내 자산 격차...‘U자형’ 뚜렷, 2018.06.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청년들이 행복조건을 ‘직업·직장’보다 ‘재산·경제력’을 1순위로 꼽은 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습효과와 현실인식이 맞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출발선이 다른 상태에서 이행기를 마주한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시장의 임금격차는 결국 생존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격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비정상적 세계에서 생존전략은 로또 당첨, 주식 대박과 같은 벼락부자를 꿈꾸며 견디거나, 헬조선을 떠나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거나 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 밖에는 다른 출구를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사회의 공여자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존중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졸인지, 대졸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동등하게 일을 하고도, 심지어 성과를 잘 내더라도 보이지 않는 신분제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따라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상에 만연한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에 맞는 정책적 수단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균질하지 않은 청년 세대 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을 주창하는 것은 어찌보면 매우 합리적이라 하겠다. 당사자로서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크게 벌어진 세대 내 격차를 좁히고, 사회적 안정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일변도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보조적 수단을 넘어 자산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 조치와 사회정책으로의 확장은 불가피하다.

작년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이러한 고민이 담겨있다.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하에, 3대 원칙을 참여와 주도, 격차해소, 지속가능성으로 세운 바 있다. 이 역시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의 핵심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하여,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 전 분야로 정책의 폭이 넓어졌지만, 개별 정책으로 나눠 살펴볼 경우 여전히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 근본적인 프레임의 전환과 규모의 확대 등에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세대 기회균등 보장정책으로써 사회출발자본을 대출지원과 직접지원 형태로 생애 신용을 보장하거나, 사회적 상속제 도입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단순 치환 법칙으로는 균질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에 조용할 수 없다.”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청년 = 대학생’이라는 단순 치환식이 널리 통용되었다. 때문에 대학생 멘토링, 대학생 장학금, 하계·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학생 취·창업지원 사업 등 정책의 대상이 모두 ‘대학생’이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초기 진입을 돕는 직업훈련이나 교육, 자기소개서나 면접지원, 일자리 매칭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실제 청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19~34세 청년 중 취업자는 64.9%, 미취업자 20.5%, 학생 14.6%인데 비해 중앙부처 청년정책 추진 사업을 살펴보면 미취업자 정책사업이 31.3%로 가장 많았고, 취업자 대상 정책이 13.4%로 나타났다.

청년정책 대상의 특성과 정책과제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초기 진입 부분 이외에도 이행 이후 일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향후에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내일배움공제 등 재직자 지원 강화 방안과 일하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청년 노동권익 보장(직장내 괴롭힘 예방, 성희롱 근절 등), 청년친화기업 확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계별 안착 등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담겨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하는 청년들이 일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에 청년 할당을 통해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 근로자가 참여하여, 임금, 복지, 안전·보건, 교육·훈련 등 노동환경과 관련된 전반을 협의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있지만, 2030세대의 젊은 청년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때문에 일터에서 노동자 이해를 대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작년 10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근로자 이익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자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 바 있다.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에 청년 노동자 비율 할당을 통해, 청년의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일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후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일터의 안전과 민주적인 조직문화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청년 당사자 참여를 일상에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법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도 그 법제도를 구현하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균질하지 않은 청년들의 삶에 잘 조응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겪는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는 물론, 기존 단순 치환식으

로 ‘청년 = 대학생’, ‘청년정책 = 일자리정책’으로 국한하기 보다는 제도권 밖의 청년들의 삶에 더욱더 주목하고, 일상 속 참여를 보장하는 일이 앞으로 청년정책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주요한 과제라 하겠다.

“삶의 존엄(적)을 지키는 길, 빛 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적 변화를 꿈꾼다.”

무엇보다도 격차사회에서 청년들이 생계로 인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발표원고에서도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수요 변화를 예상한 바와 같이 저소득, 저신용, 저복지 청년들의 과부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취업이 안 되거나, 휴·폐업으로 실직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생활금융 정책은 학자금 대출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자금 대출 초창기 7%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시행한 청년들에 한 해 2.9%로 낮춰주는 전환 대출 시행 등 교육비 관련 대출에 대한 지원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9세 이하 청년들의 부채 보유액은 가구당 9,11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금융부채 등 금융부채 비중이 82.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알 수 있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39세 이하 가구는 140.3%로 112.2%인 자영업자 가구보다도 재무건정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4만 5,490명)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이 1.2배(691명→83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외에도 주거비, 생활비 등의 규모가 청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현재 경제침체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쌓여있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 불법고금리 대출이나 금융범죄 등에 쉽게 노출되거나,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저신용, 저소득, 저복지 상태에 놓인 3저 청년들을 위한 부채 경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를 근거로 하여, 하위 법률인 「청년 부채 경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 마련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채무조정, 채권면책’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과채무 청년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채권자가 빚을 갚는 문제(변제)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 대리인인 변호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신용위기회복 생계비지원, 청년 경제적 회생을 위한 신용대출사업(햇살론 유스 등) 등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자, 한국장학재단 6개월 이상 연체자, 국민행복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채무자 등 과부채 상태의 청년들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채무 조정 및 감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청년신용회생제도’를 별도로 도입함으로써 채무 일정 금액 상환 후 채무조정, 채권면책 등을 통해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청년재무상담 기능을 강화하거나, 아예 별도로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에 청년생활금융상담사를 배치하여, 과채무 상태의 청년들을 위한 채무·재무 상담 프로그램 등 제공하는 것 역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빚쟁이로 시작한 청춘, 언제 끝나나요?’라는 물음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약탈적 금융을 용인하고 빚을 더하는 방식으로 응답해왔다. 그 결과 청년들의 삶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위기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당장의 위기 앞에 선 청년들의 금융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 안정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빚을 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금융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 30대가 빚쟁이가 되지 않고도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등 기본적인 사회권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조은주, 2021)

[illegibl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청년 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 포럼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